

## 대선 이후 기본소득 운동은 어디로

###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이사장

지난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시간은 열광과 기대, 냉소와 절망이 교차하고 중첩되어 있던 때였다 물론 우리는 한사코 우리 앞에 놓인 사건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고, 소극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았다. 우리는 기본소득 정책이 당장 실현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공격적인 길을 가기 원했다. 그리고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깊이 있는 논의의 바다에 빠지고, 폭넓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위치에 가기를 원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의 결과는 다 알고 있듯이 반대 방향으로 가기를 강요하는 듯이 보인다. 1차적으로 어느 수준이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의 패배 때문이며, 현실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구호 이외에는 그 어떤 정책 방향도 철학도 없는 정권의 탄생 때문이다. (이 정권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은 논외로 하자.) 게다가 대선 이후의 정치적 풍경은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논투가 아니라 비판 이하에 있는 것들을 둘러싼 지루한 진실 공방 그리고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말 그대로의 투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속에서 당연히 기본소득과 같은 의제는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풍경 바깥으로 밀려나 있다.

이런 정치적 폐허 속에서 여전히 기본소득 운동이라는 게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 기본소득 운동의 경로

한국에서 기본소득 운동은 십여 년 전에 일종의 의제 운동으로 시작했다. 새로운 진보적 전망으로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구를 심화하고, 제도와 정책으로서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설계안을 만들었다. 또한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를 위한 중심 기관이자 망으로서의 역할을 한 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다.

2014~2015년이 지나면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회원 조직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한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IEN Congress를 개최할 준비를 했다. 또한 ‘민주 진영’의 진보적 정치인과 정책 협력을 통해 현실에서 가능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런 시도와 노력은 정치적 일정과 사건에 의해 호흡이 가빠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기본소득 의제가 부상하는 과정은 점진적이었다. 무엇보다 무조건성을 고유한 특징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그만큼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아이디어였다. 물론 특히 경제적, 기술적 변화에 따라 우리가 목도한 현실, 즉 관찮은 일자리의 부족과 그 경향이 기본소득 아이디어 수용에 우호적인 배경을 이루긴 했지만, 이 또한 두 가지 난점이 있었다. 하나는 모두에게 물질적 보장을 하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저 소득을 위한 일자리가 없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너무 단순하거나 퇴행적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무조건성과 맞물려 있는 것인데, 기존의 지배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좀 더 받아들여지기 쉬운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쉽다는 것은 아니다) 다른 정책들과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했다는 것이다.

점진성은 기본소득이 하나의 정책일 수 있기 때문에도 나타났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이 포괄적인 사회적, 생태적 변화의 주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과 달라질 것이라고 상상하고 기대한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소득 보장 정책의 하나로 보이고, 이런 점에서 작은 정책이나 실험으로 외삽될 수 있다. 이런 면이 제도적,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청년배당/ 청년 기본소득 등으로 기본소득의 실질적인 여행이 시작될 수 있었다.

의제 운동으로 출발한 기본소득 운동이 점진적인 확산의 시도를 거듭하고, 실현의 고리를 잡으면서 하나의 궤도가 만들어졌다. 그것은 한국 정치에서 포퓰리즘의 계기인 대선을 하나의 분수령으로 삼는 것이다. 이는 상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역사적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장기적 배경으로 하고, 87년 체제를 제도적 틀로 하는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보적 변화를 위한 (물론 반대로 이를 막으려 하는) 폭발적 계기가 되었다.

기본소득 운동과 같은 의제 운동은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는 기본소득 의제가 가진 고유한 난점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주체의 부재이다. 구 사회운동은 계급 혹은 민족이라는 주체의 움직임이자 주체의 형성이었고, 신 사회운동조차 주체 혹은 당사자라는 틀을 넘어설 수 없었다. 여기서 문제는 기본소득의 주체는 어디에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이다. 기본소득이 보편적인 것이라

면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기본소득이 공유부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는 모두의 공통성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는 공유자라 불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무엇으로 호명할 것인가? 현실에서는 시민[국민] 혹은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 이외에 다른 이름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 운동은 포퓰리즘적 계기로서의 대통령 선거를 이용하거나 대통령 선거를 포퓰리즘 계기로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포퓰리즘의 인격은 강고한 양당 체제 밖에서 만들어지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포퓰리즘적 계기는 걸모습과 달리 그리 폭발적이지도 급진적이지도 않게 된다. 도리어 뾰족해지는 것은 진영 사이의 대결이다. 그러니 이 속에서 어떤 의제가 가진 급진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의제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한 것이 이런 일이었다. 의제는 점점 경기장에서 밀려나고 의제의 급진성을 둘러싼 논의도 함께 사라진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로드맵이 후자를 살려내기 위한 준거점 마련이었다면, 기본소득당의 대선 참여는 경기장의 경계선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였다.

### 기본소득의 포퓰리즘적 계기와 난점

출발선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대선을 거친 현재의 기본소득 운동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을 최저임금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던 시절 소규모 서클로 기본소득 의제 운동이 출발했던 것을 기준선으로 잡으면 기본소득 운동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제적으로 언급되던 질문이자 희망, 즉 “한국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는가?”를 떠올리면 커다란 좌절과 패배를 맛보았다고 할 수 있다.

앞 부분에서 기본소득 운동의 궤적에 대해 말한 것은 현재의 좌절과 패배를 가리거나 희석하기 위한 게 아니다. 도리어 이번의 좌절과 패배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조건이다. 후일 회고적으로 볼 때 작기는 하겠지만 기본소득 운동의 출발에서 이번 대선까지는 하나의 순환으로 볼 수 있다. 이 순환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때 패배는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더 나은 패배가 될 것이다.

우선 앞서 말한 것처럼 의제 운동으로서의 기본소득 운동은 제도 정치 내에서 정치적 인격과 통로를 찾았고, 그 덕분에,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얻을 수 없었던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냈다.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위기 속에서 제안된 재난 기본소득도 중요한 계기이긴 했지만 영향력 있는 정치가가 기본소득을 자신의 주요 정책으로 실현해가려고 했고, 또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기본소득 의제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기본소득 의제가 이런 방식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기반이 단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구멍이 있었다. 우선 제도화된 정당과 대통령 선거는 고유한 구조와 동학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겠다.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아무리 포퓰리즘적 계기라 하더라도 대표 인격인 후보의 카리스마는 카리스마(신의 은총)라는 말과 달리 현실의 세력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 인격이 내세

운 정책이 진정성 있게 전체의 정책으로 전환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는 전략이나 전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른바 다수를 획득하기 위해 중도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말일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급진적 혹은 진보적이라고 보이는 것을 후퇴시켜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어쨌든 이재명 캠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해두자. 게다가 선거가 진공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난 정권에 대한 평가가 주요한 모수(패러미터)가 되어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도 확인해두자. 이 속에서 2022년 대선은 바람과 달리 ‘기본소득 대선’이 되지 못했다.

기본소득 의제가 단단한 기반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기본소득 운동의 처지를 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앞서 말한 기본소득 의제에서 주체의 부재라는 난점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이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물론 이재명 후보 및 캠프가 기본소득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기본소득 운동이 좀 더 날카롭게 비판했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어느 수준에서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어쨌든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라고, 앞서 말한 것처럼 기본소득이 공적인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물론 양당 체제에서 다른 쪽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의제 자체가 실종된 선거판에서 어떤 의제의 진정성을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 때문이다. 만약 다음 번 포퓰리즘적 계기 속에서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될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대선이 지나면서 기본소득의 밀물이 빠지고 갯벌이 드러났다. 폐허가 아닌 갯벌은 다행스럽게도 생명의 보고이다. 작지만 다양한 삶들이 꾸려지고 있다. 기본소득 의제, 정책,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이다. 대선은 허망하고 안타깝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부터 뿌려진 씨앗이 모두 싹을 틔우지 못한 것은 아니다. 아마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두 번째 순환은 더 나은 실패 위에 있게 된다.

## 기본소득의 일반화

기본소득 의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토픽이 있다. 정당성, 필요성, 현실성이 그것이다. 정당성은 왜 모두가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어떤 권리인가를 논하는 것이다. 필요성은 어떤 변화가, 어떤 미래가 모두에게 고용 노동과 무관한 소득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일이다. 현실성은 사회 전체적으로 일정한 부를 이런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지속가능한지를 따져보는 일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소득을 창출하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한 논리에 기초해서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필요성은 언제나 대안적

인 정책에 가로막히거나 희석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일찍부터 기본소득의 정당성 문제에 천착했고, 잠정적 결론은 모두의 것인 공유부에 대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의 분배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는 근대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인 노동-소유 패러다임의 전제, 즉 태초에 공유가 있었다는 것에 출발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과녁을 세운 셈이다. 다만 공유가 태초의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잊혀졌고, 이런 면에서 기본소득은 낯선 아이디어처럼 보일 뿐이다.

공유부의 분배라는 것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찾을 경우 현실성의 문제도 사실은 해결된다. 모든 사회는 공유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실성 문제는 경제학적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갈등의 문제가 될 것이다.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정당성 문제가 떠오른다. 물론 공유부에 대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이라는 논변만이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아닐 수 있다. 모든 시민이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 보장 혹은 자유의 사전 분배라는 민주적 공화주의의 논변이 있으며, '실질적 자유'라는 논변도 있다. 이는 정치적 논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정치경제학 비판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과 분배 형태를 문제삼고 사실은 모두의 것이지만 일부에게 귀속되는 부를 해명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기본소득의 현실성 문제를 해명하는 일이 된다.

여기까지는 기본소득 운동 초창기에 천착했던 문제를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혹은 좀 더 깊은 수준에서 반복하는 일이 된다. 하지만 한 가지 차원이 더 있다. 새로운 기후 체제 속에서 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후 체제가 기존의 정치 자체를 완전히 무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강하게 규정하고, 굴절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기본소득이 근대적 의미의 해방 그리고 이의 기초인 경제적 할당에만 머문다면 미래를 말하는 프로젝트이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기본소득은 일찍부터 생태친화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에게 물질적 보장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소득 보장 방식인 (완전) 고용에 대한 집착 및 이를 가능케 하는 성장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는 더 풍요로우면서도 환경에 부담이 덜 가는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후 정의' 운동은 이 차원을 뛰어넘고 있다. 우리는 당장 새로운 기후 체제에 적응하고, 부정적 변화를 완화시켜야 하며, 그것도 모든 존재에게 정의로운 방식이어야 한다. 물론 기후 정의를 위한 목표 및 필요한 여러 방도는 이미 제출되어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이라는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고 필요한 방도를 구현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다. 이를 우리는 기본소득의 일반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다음 번 포퓰리즘적 계기를 향해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진지전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소

특의 정당성, 필요성, 현실성을 과거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더 깊이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새로운 기후 체제 속에서 논구하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진지전<sup>war of position</sup>이다. 하지만 진지는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그것도 다층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원래의 의미와 다르지만 진지전에도 운동전[기동전]<sup>war of manoeuver/movement</sup>의 요소가 들어 있다. 우리의 운동전은 다양한 힘들과 연결하고, 모두에게 잠재해 있는 공유자성을 끌어내는 일이 된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다음 번 포퓰리즘적 계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위기보다 더 큰 위기와 함께 훨씬 폭발적일 것이다. 물론 그 시간 속에 기본소득 의제가 있을 것인가, 있다면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등은 순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